

‘514조 슈퍼예산안’ 與野 격돌 공수처 등 엮여 심사난항 예고

예결위 소위원회, 첫 회의 돌입

내달 2일 본회의처리 법정시한
與 “경제악화… 확장 불가피”
野 “내년예산, 묻지마 과소비”

내년도 예산심사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나섰다.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것은 물론 정치·사법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관련 협상도 얽혀 있어 심의는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여권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경기 악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까지 대응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 편성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을 ‘묻지마 과소비’로 규정하고, 내년 예산 중 14조5000억원을 순삭감액으로 설정했다.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해 500조원 이상은 못 넘긴다는 기조다.

같은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실패의 폭정을 막기 위한 예산심사”라며 “514조원 슈퍼 예산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분열예산·대북굴욕예산·살포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

권 조정 등을 중점으로 지정한 패스트 트랙 안건 협상과도 연관 있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 안건이 다음 달 초에는 모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와 기조가 달라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과 패스트 트랙 법안이 12월 첫 주 본회의에 상정되고, 일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2년반 동안 과거 극복, 미래로 나아가”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국민 격려·질책에 귀 기울일 것”

임기 절반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 첫 공식석상에서 향후 국정운영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며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고 집권 반환점을 돈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진행했던 국정운영을 크게 ▲경제사회 분야, ▲포용적 분야, ▲한반도 분야, ▲외교 분야, ▲일본발 수출규제 등 5개로 나눠 설명했다.

집권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소감에 따르면, 현 정권은 경제사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한 불평등 경제를 ‘사람중심경제’로 전환했다. 연장선상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기 위해 힘썼다.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 연장선상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도입·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때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재판 중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해야”

법원 “정보공개법에 해당 안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면 비록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과기록 등 과거 수사자료를 검찰이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국당 “500兆 못 넘긴다”... 예산삭감 총력

‘예산전쟁’에 행정·재정통 투입
예결위 소위원회 총 15명 구성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산업·재정·행정 등 각 분야 정통인으로 배치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7명)·한국당(6명)·바른미래당(2명)으로 구성했다. 16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섭단체 1명 뺀 15명으로 설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간사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의원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바른미래는 지상욱·정운천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과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 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인석 의원을 예산소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오른 전문가들이다.

먼저 김재원 의원은 당내 입법·사법·행정 3관왕으로 꼽힌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에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이후에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했고, 19·20대까지 3선 중진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당내 행정통이다. 행정안전부 2차관까지 지냈고, 2011년에는 총주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19·20대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예산소위에서는 대전·충북·충남 지역 예산을 검토한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당 중점 추진 예산을 집중 심의한다. 재선인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20대 재선인 이현재 의원은 산업·자원 전문가로 꼽힌다. 2006년 현 중소기업벤처부 전신인 중소기업청 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인천·경

기 등 국내 주요 지역 예산 심의를 맡았다.

박완수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을 중점적으로 맡았다. 조선이지만, 김해시 부시장에 이어 창원시장을 세 번이나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다.

송인석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선이지만,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재정 전문가다. 대구·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예산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내에선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재정을 핵심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를 맡았다.

예산전쟁 최전선에 배치된 이들은 경력·경험을 살려 당 기조에 따라 삭감을 중심으로 재정 낭비 막기에 나설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백서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철저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출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모든 의혹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수사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우선적으로 기존 수사기록과 조사 기록 살펴



기자들 앞에 선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뉴스1

보고또한 세월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추가 의뢰 예정인 사건, 세월호 가족 협의회 추가 고발 사건 기록까지 종합 검토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